

#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VII):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  
과제책임자 박복순 연구위원 (Tel: 02-3156-7129 / E-mail: pbs0113@kwidimail.re.kr)

##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의 필요성

### 초록

-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혼인과 혈연을 벗어나 생계의 공유, 정서적 유대, 친밀한 관계 등을 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등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고, 주변인들을 통해 가족의 다양화 현상을 접할수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는 높아짐.
- 반면, 다양한 가족 실천을 행하는 사람들을 법적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가족 내 재산을 공유하거나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긍정하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남.
- 그렇다고 하여 이들을 계속 제도권 밖에 놓아둘 것인지는 모아진 의견에 대한 보다 깊은 분석이 필요함.
- 현행 제도의 미비가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새로운 법 제정을 꾀할 필요가 있음.



### 가족에 대한 인식

64.4%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공동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

62.5%

반드시 함께 살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있는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



## 1. 배경 및 문제점

- ① 현실 속에서 영위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생활의 모습이 가족을 규율하는 법에 충분히 수용되지 못함으로써 현실과 법의 괴리감은 커져 있음.
- ② 가족 구성 방식의 다양화로 혼인과 가족의 연관성이 점차 약화되는 가운데, 기존의 법률혼을 중심으로 한 가족 관련 법령들이 법률혼 밖에서 가족을 구성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배타적으로 인식되고 있음. 따라서 법과 현실의 괴리 현상을 극복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가족구성원들이 경험하는 차별을 제거하고 이들에게도 법적,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 조사 및 분석결과

<표 1>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조사 목적: 일반 국민의 가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li><li>• 조사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65세 이하 성인</li><li>• 조사 기간: 2019.8.14~8.22</li><li>• 조사 방식: 웹 설문조사</li></ul>

- ① 국민들의 가족에 대한 이해는 법적 정의보다 더 넓게 나타남.
  - ▶ ‘가족’의 개념에 대한 질문에서, 법률혼의 표지인 혼인 및 혈연이 아니어도 공동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며, 더 나아가 공동주거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정서적 유대를 갖는 친밀한 관계라면 가족이라고 그 개념을 확장하는데 동의하는 응답자 비율이 각각 64.4%, 62.5%로 높았음.
  - ▶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에서도 법률혼의 요건인 혼인신고보다도 ‘본인들의 부부로서의 인식’을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함.
- ② 동거에 대한 인식에서는 응답자의 61.2%가 긍정적으로, 38.8%가 부정적인 취지로 응답하여 긍정적인 태도가 더 많음.
  - ▶ 동거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경우, 경제적 제약 및 사회적 제약으로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 결혼제도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동거, 결혼의사 없이 경제적 편익을 위한 동거는 부정적인 의견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사회적으로 결혼에 대한 정상성이 여전히 우세하고 동거의 이슈에는 섹슈얼리티에 의한 사회적 편견이 함께

작용하고 있어,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과 연결되지 않은 동거 그 자체에 대한 동의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절반 정도의 찬성률로 조사됨.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거 자체와 유형별 동거에 대한 수용도가 응답자의 동거에 대한 평가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동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및 유형별 동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에는, 응답자 자신이 동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대기보다는 동거가 법률혼에 비하여 사회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 결국 동거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는, 혼인 또는 혼인 유사 관계에서 법적 보호의 부족이 여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동거에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들 중에서 다수는 동거 관계에 대한 법적 보호가 확대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태도와 관행이 축소된다면 긍정적인 태도로 전환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법률상 혼인 및 혼인 유사 관계의 개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10% 정도는 법률혼, 사실혼, 동거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은 실제로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보장되는지, 어떤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실제, 개념에 대한 이해도보다 (법률혼 관계에서는 인정되나) 동거 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 정도가 더 낮게 나타남.
- ▶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4.9%는 동거 관계에서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거나 ‘친인척 관계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각각 25.5%, 23.5%로 적지 않았음. ‘잘 모르겠다’는 응답 역시 드물지 않았음. 그러나 이러한 오해는 그동안 법률혼이 아닌 동거를 실제적 실체로서 인정하지 않았던 법과 제도가, 오히려 동거를 충분히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생활의 실체로서 여기는 국민과의 인식 격차가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함.
- ▶ 사실혼 관계에서의 권리, 의무에 대한 이해도는 동거 관계에 대한 이해의 정도보다 더 낮았음. 자녀 입양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만이 제대로 알고 있었고, 친인척 관계 발생 및 유산 상속에 대해서는 ‘권리가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음.
- ▶ 주목할 점은 이미 사실혼 관계에 확대 적용되고 있는 제도의 내용인 ‘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 혜택 및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아는 응답자는 38.1%에 불과했다는 점임. 법과 정책에서 사실혼 관계의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해 가능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생각됨.



**사실혼 관계의 커플에게 상속 및 입양 등 3가지 항목에서 법률혼 관계와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질문한 결과, 공동입양에 대해 57.5%가 찬성하고 사실혼 배우자의 유산상속과 친양자입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태도가 더 많았음. 특히 친양자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67.8%로 가장 높았음.**

- ▶ 동거 관계의 당사자에게 법률혼 관계와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9가지로 질문한 결과 세부항목별로 응답률이 다르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사실혼보다는 부정적 응답률이 더 높았음. 총 9개의 항목 중 동거

관계에 법률혼과 같은 권리를 인정하는데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았던 것은 단 2개의 항목에 불과함. 의료적 필요시 보호자로서 서명할 수 있는 권리, 사망 시 시신을 인도받아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동의의 정도가 높아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했지만, 그 외에 동거 관계에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받거나 상속을 받거나 입양을 하고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가 되고 주택정책과 회사의 사내복지 범위에 포함되는 권리, 즉 사회적 제도의 혜택을 주는 데에는 동의 정도가 낮았음.

- ▶ 그러나 조사결과와 해석에서는, 사실혼 또는 동거 집단의 표본수가 작아 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설문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도 실제 당사자 집단에서는 이러한 자격부여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다는 사실에 더 주목해야 할 것임.



또한 이러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가족의 개념이 결혼과 혈연의 넘어 돌봄과 유대, 친밀성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으로 확장되는 변화가 있고, 이 변화가 의식의 측면에서는 뚜렷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다양한 가족에 대해 어떤 권리를 인정하고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이고 거리를 유지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임.

- ▶ 법률혼 부부에게는 다양한 사회적 급여(혜택)가 공공의 영역이나 민간의 영역 모두에서 제도화되어 있는데, 이를 법률혼 바깥에서 돌봄과 유대, 친밀성으로 맺어진 다양한 가족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동의하는 의견과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대략적으로 3:7 정도로 나타남. 이 구성 비율이 7:3으로 뒤바뀌어 동의하는 의견이 높았던 항목은 사회적 지원과 혜택과는 성격이 다른, 동반자에 대해 보호자로서 의료현장에서 서명하고 보살피고, 시신을 인수하여 장례를 치르고 애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것이었음. 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 권리는 사회적 자원을 평등하게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돌보는 권리인데, 사실 권리인 동시에 돌봄에 대한 책임이기도 함.
- ▶ 대안적 가족 개념에 대한 동의의 정도는 빠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비혼인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자원의 배분, 제도적 지원의 범위, 권리보장의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가족 개념에 대한 인식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지체되는 한계를 보여준다고 하겠음.



전반적으로 집단별 평균의 비교에서 직업 유무 및 학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가 매우 드물었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경우는 주로 동거 태도 문항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혼인 외 관계 경험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 ▶ 연령대별로는 세대별 인식차이가 나타남. 동거에 대한 인식과 생활동반자법 도입에 대해서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동거 및 사실혼 관계에 법률혼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데 대해 60-65세 또는 50-59세 연령대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문항도 있었는데 주로 사실혼 및 동거 관계에서 상속 권한, 동거 관계에서 유족연금이나 유족보상금, 사망자 시신 인도, 건강보험 등에서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었음.
- ▶ 더 많은 문항에서 집단별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혼인상태, 혼인 경험 및 의사, 과거 동거 경험, 가족 중 이혼/별거/재혼 경험, 주변에 혼인신고 하지 않고 같이 사는 사람 유무였음. 사실혼을 포함한 결혼한 집단, 법률혼 집단, 혼인 경험 및 의사가 전통적인 집단, 과거 동거 경험이 없는 집단, 가족 중 이혼/별거/재혼 경험이

없는 집단, 주변에 혼인신고하지 않고 같이 사는 사람이 없는 집단이 대체로 다양한 가족의 수용이나 다양한 가족관계에 권리를 부여하는 데에 더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

- ▶ 반면, 결혼한 적 없고 현재도 결혼하지 않은 집단, 동거 집단 또는 미혼/비혼 싱글 집단, 혼인 경험 및 의사가 비전통적인 집단, 과거 동거 경험이 있는 집단, 가족 중 이혼/별거/재혼 경험이 있는 집단, 주변에 혼인신고하지 않고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 집단에서 더 긍정적인 입장을 보임.
- ▶ 즉, 응답자 본인이 다양한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거나 향후 전통적 혼인 관계에 편입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 및 다양한 가족에 법률혼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3. 정책제언



#### 가족개념의 분절화

- ▶ 현행 우리 법상의 가족 개념은 헌법과 기본법, 민법, 사회보장법의 영역에 걸쳐 강하게 결부되어 작동하고 있음. 그러나 각각의 법은 그 법의 취지에 맞는 각자의 기능을 갖기 때문에, 모든 법 영역에 통일된 가족 개념은 존재할 수 없고, 민법의 가족에 대한 범위 규정이 헌법에서도, 사회보장법의 영역에서도 작동하는 것은 맞지 않음. 따라서 현재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족개념의 분절화’가 요구됨.



#### 헌법 제36조제1항의 의미 정립

- ▶ 헌법 제36조제1항은 혼인과 가족관계가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기능하며, 이에 위배되는 경우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되고, 새로운 형태의 혼인과 가족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와 혜택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으로 기능해야 함.



#### 법에 내포된 가족 관점의 전환

- ▶ 가족위기이론에 입각하여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가족 관련 관점의 대전환이 요구됨. 즉, 국가 발전보다는 개인의 존엄과 평등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아이를 낳거나 낳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 재생산 전반의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와 구성하지 않을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혼인 및 가족생활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수용하고 가족의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함.



#### 사적 자치의 확대를 위한 해석론과 입법론의 전개

- ▶ 당사자의 사적 자치의 최대한의 보장을 통한 다양한 가족 구성 방식을 허용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가족 부양이 약화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개인 간의 연대를 통한 국가에의 복지 의존을 줄이는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사회 공정의 원리를 확립하기 위해 강하게 규제되고 있는 “특수관계인” 및 각종 제척/회피 규정에서 형식에 불과한 가족관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실질적인 관계까지 포섭하게 되는 이점도 갖게 됨.

① 호주제 하에서 친족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가족에 대한 규정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개인이 자유롭게 가족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가족의 삶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민법을 통해서도 실현할 수 있도록 민법의 틀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② 더불어 민법상의 가족의 범위 규정은 민법 내에서는 실질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한 채 상징적으로 존재하면서, 다른 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포섭과 배제의 차별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상의 가족의 범위나 정의 규정은 삭제되어야 함. 또한 변화하는 시대에 건강가정기본법의 역할은 이상적인 가족상을 두고 그로부터 벗어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상성을 회복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원만한 가족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임.

③ 사실혼에 대한 성립요건의 완화가 요청됨.

- 실질적인 혼인의사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공동생활을 영위하더라도 혼인의사를 갖지 않은 커플들을 사실혼 보호를 위한 준혼법리로 포섭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주관적 의사는 성립요건에서 제외하고, 외형적으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판례이론의 전개가 필요함.
- 이렇게 되면 현 시점에서 사실혼이 보호받는 정도만큼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생활동반자 관계도 사실혼의 보호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됨.

④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의 확장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음.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재산관계의 청산이나 부양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사실혼 관계의 해소가 생존한 다른 일방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민법상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 규정(민법 제1057조의2)에 의하면 특별연고자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가 포함되고, 사실혼 배우자뿐만 아니라 생활동반자도 포섭될 수 있지만, 이 또한 피상속인에게 4촌 이내의 혈족이 존재하지 않아야 찾아오는 기회로서, 재산의 공정한 청산 기회 이후에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함.

⑤ 생활동반자의 유족으로서의 지위 보장이 요구됨.

- 우리 민법은 사유재산제도의 존중,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라는 근대 사법의 3대 원칙을 수용하면서도 가족을 규율하는 친족상속편은 전통과의 조화를 위해 계약법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지 못한 바 있음. 법 제정 이후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전통은 현대화과정에서 많이 변모되고, 개인들의 의식도 집단으로서의 가족보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를 더 중요시하는 쪽으로 변화해옴. 이러한 가족가치의 변화를 가족법의 영역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
- 민법의 상속편은 유족의 생계보장 및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한 청산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상속인의 의사보다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의 권리확보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음. 이를 대표하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임(민법 제1112조). 이러한 현행법상의 제약으로 상속권이 없는 특별한 누군가에게 유증을 하더라도 유류분 제도로 인하여 특별한 누군가의 유증을 받을 권리는 온전히 확보되지 못함. 유류분 권리자에 배우자에 준하는 지위로 생활동반자를 추가하는 것과 더불어 사후 유족의 생활보장을 확보할 대상자의 범위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등으로 하여 그 대상을 좁혀 나가야 할 것임. 또한 사망 이후 남겨진 생활동반자의 주거권의 보호도 강화되어야 함.

⑥ (가칭) 생활동반자법의 제정이 요구됨.

-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가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혼인과 혈연을 벗어나 생계의 공유, 정서적 유대, 친밀한 관계 등을 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등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고, 주변인들을 통해 가족의 다양화 현상을 접할수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는 높아짐. 반면, 다양한 가족 실천을 행하는 사람들을 법적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가족 내 재산을 공유하거나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긍정하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남.
- 그렇다고 하여 이들을 계속 제도권 밖에 놓아둘 것인지는 모아진 의견에 대한 보다 깊은 분석이 필요함. 현행 제도의 미비가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새로운 법 제정을 꾀할 필요가 있음.

❏ 사회 인식 개선 운동과 지역적 접근의 전개

- ▶ 새로운 법 제정의 움직임과 함께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법제화에 걸릴 시간을 생각할 때 단계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첫 번째는 제도적 수용 이전에도 새로운 가족구성을 시도한 당사자들이 생활상에서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시도로 기존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생활상의 불편을 덜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 상황에 대한 보호를 미리 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과 사회보장 안내책자를 만들어 홍보하는 것임.
  - 혼인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에서 계약적 요소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나, 젊은 연령대에서는 의식의 변화와 함께 수용적인 태도를 견지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하나로 묶어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인식개선사업과 함께 홍보책자로 활용하는 것임. (가칭) “생활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한 당사자들을 위한 안내책자”에는 자신이 선택한 가족구성방식이 법률혼을 선택한 사람들과 어떠한 권리와 의무상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안내와 삶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알리고, 그러한 위험 회피를 위해 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는 정보를 담는 것임.
- ▶ 두 번째는 일본과 유사한 지역 차원의 접근을 전개하는 것임.
  - 일본은 현재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은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요강(지침)을 통하여 파트너 관계의 사회적 승인을 가능토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접근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비록 법적인 구속력은 충분하지 않지만, 관계의 사회적 승인을 통하여 무시와 무권리상태를 승인과 사회참가, 정치참가를 촉구할 수 있는 장으로 전환하고, 의식 개선과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그렇지만 지역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입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다양한 가족구성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생산의 틀 마련

- ▶ 가족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가족구성이 다양해질 수 있음을 짐작케 하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률혼 외의 가족구성이 어떤 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보여주는 통계는 빈약함.
- ▶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혼인상태와 관련하여 초혼과 재혼을 포함하여 법률혼 상태에 있는 비율이 58.9%, 사실혼 상태에 있는 비율이 1.3%, 동거관계는 0.6%, 미혼/비혼 싱글은 39.1%의 분포를 보임. 동거와 사실혼의 구분이 애매한 점을 감안하여 두 관계를 모두 포함하여 동거관계로 파악하더라도

1.9%로 미약한 분포임. 동거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거를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으나, 반대로 부족한 양적 조사결과가 제도 개선에 한계로 작용하기도 함.

- ▶ 따라서 향후 동거 가족의 편견 해소 및 제도적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족구성의 변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지속적인 통계생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관계부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